

이슈 리포트

21

2003년 12월 첫째주 (12/1 ~ 6)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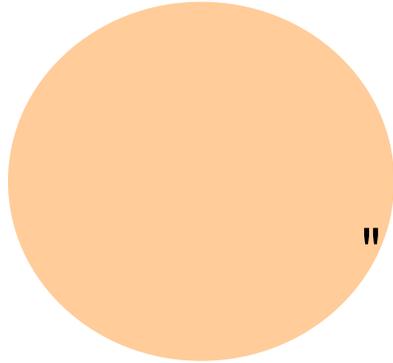
-	
- 노동자 세상: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 통신정책	스팸메일 차단
- 정자동 6층에서:	IT산업노조연맹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세상돋보기

||



||

☞ 국회의원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 결정부터 뻔한 답을 내기 위한 제스처라고 생각했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나리들은 언제나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연 그들의 조사결론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나?!, 역시나! 였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기에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이라크 파병 반대에 적극 노력하는 평화군축센터의 입장을 게재한다.

바그다드에서 로켓포 공격을 받고 미군정이 제공하는 거처로 옮겼던 국회조사단이 어제(26일) 귀환하였다. 그런데 국회 조사단의 일부 의원들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조사단장인 강창희(한나라)의원은 "이라크 전역 6곳에서 현지 군 및 경찰 관계자와 주민, 종교지도자 등 2백여명을 면담한 결과 정치적 테러가 빈발하는 바그다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치안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라크인의 한국군에 대한 인상은 매우 좋았고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조사단은 바그다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군정이 주선해주는 인물들만을 만났다. 게다가 바그다드에서도 로켓포 공격으로 예정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안전문제로 제대로 조사활동도 못한 강창희 의원이 당당하게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는 데 경악한다.

정진석(자민련) 의원 역시 "북부 모술지역은 치안유지군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와 주민, 종교지도자 등이 안정화에 필요한 치안유지군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원은 국회조사단이 이라크에 머무르는 동안 모술에서 일어났던 미군 살해사건은 벌써 잊었는지 의문이다. 장의원의 조사결과와 현지여론조사결과는 너무도 다르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주선에 의해 한겨레신문과 바그다드 대학 국제연구소가 이라크 7개 도시, 902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인의 80%가 한국의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모술, 키르쿱 등에서는 비전투병에 대해서도 각각 81%, 9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이 만난 모술지역 인사는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 역시 정진석 의원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시한 채 국정에 임하는 무책임한 공직자는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송영길(열린우리당)의원이나 한충수(민주당) 의원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송의원은 "전투병 파병은 안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 의원은 "당과 협의하고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협의와는 별개로 자신이 현지에서 보고들은 바가 무엇인지 세세히 밝혀야 한다.

조사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회조사단 조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우리가 정부 2차 조사단에 대해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였다고 혹평하였음에도 그 나름의 의미를 인정하는 까닭은 정부 2차조사단 보고서가 조사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조사의 한계를 적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조사단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려면 조사대상과 조사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그 한계와 의미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미군연합임시행정처의 의뢰로 영국의 글로벌리스크스트래티지사가 조사요원 1000명을 동원해 조사한 '이라크 전략상황평가' 보고서는 "이라크인들은 점차 미국인들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역시 CPA의 꼭두각시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유엔이 이라크에 즉각 들어가지 않으면 CPA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의 주도권을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미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라크 민심의 이반을 한국 국회의원들만 애써 무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군정도 인정하는 '꼭두각시'들만 만나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

!!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수가 및 보험료를 현재에 비하여 각각 2.65%, 6.7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결정의 의미는 정부가 여전히 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민부담 2중으로 늘어나...

반면 수가는 가입자대표들이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현재보다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은 2중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의료비로 인하여 집안이 망하고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받게 되었으며,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2006년까지 급여 적용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건강보험'이 되기는커녕 거꾸로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다.

올해, 1조원이상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 수지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분명 국민의 돈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200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5.8%씩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1.2%씩 증가하여 올해 1조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목표하였다면, 당기수지 1조원의 흑자는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내년도 보험료를 또 다시 인상한만큼 1조원의 흑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급여확대를 내놓고 있지 않다. 고액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도입과 '본인부담보상제' 개선에 약 1300억원, 일부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약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764억원이 소요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고작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답답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조차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실효성과 관련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의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더욱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종 질환'으로 인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림의 떡' 수준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비록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처럼 정부는 '생색내기용'만을 국민 앞에 내놓았을 뿐 실질적인 급여확대 계획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누적적자만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편 우리는 지난해 연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자 2조 6천억원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수용하여 1년 사이에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적자는 정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재정은 결국 의약계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의약계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약계·국민이 건강보험 적자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올해 처음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흑자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매년 8~9%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묵묵히 수용한 결과이며,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급여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며,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는 전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료인상을 철회하고 보험급여를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건강관련 단체 성명서 참조)



☞ 아침에 출근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PC를 켜고, 인터넷을 열고,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 작업을 하면서 혹시 반가운 소식은 없을까하는 기대를 맘껏한다. 하지만 음란스팸메일이 먼저 화면을 장식한다면 아침의 상쾌함, 기대감들은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이어서 본인에게까지 스팸메일이 전달된다면 성인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로 음란 스팸메일이 전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다행히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IT회사의 IT간부라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기억하였다가 주변 친지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면 정말 먼저 IT맨일테... 다음은 정보윤리위원회의 공지내용이다.

성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무차별 전송되고 있는 음란스팸메일은 정서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왜곡시킴은 물론, 모방범죄도 유발시키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억2천만원을 들여 PC 이용자 차원에서 음란스팸메일을 90%이상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음란단어뿐만 아니라 음란이미지 및 해외에서 개설된 한글로 된 음란사이트 주소(URL)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소프트웨어를 11월 10일부터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음란스팸잡이”로 명명된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한국ISP협회(www.kispa.or.kr), 학부모정보감시단

(www.cyberparents.or.kr), 네이버(www.naver.com)등 7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달말까지 다음, 야후 등 대형포털사이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D로도 제작하여 장애인 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 공공기관 보급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 주요 우체국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콜센터 전화(☎ 02-3415-0227~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프트웨어가 전국 가정, 기업 등에 확산 보급되면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일반성인들도 음란스팸메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ing)

☞ 제목을 보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몇몇 분은 ‘뭐? 언제 IT노협이 산별노조 설립을 했어?’라고 생각 하실 분도 있을텐데 사실은 그 IT노협이 아니고, 컴퓨터그래머 등 정보기술(IT)분야 종사자 몇몇이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구성주체나 처지 등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명칭에서 보여주듯 우리가 가야할 방향과 같은 이데이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하자.

1. 과정

2003년 8월경 IT산업노동조합연맹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IT산업에 종사하는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상호 처지의 어려움 등을 나누면서 단결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임.

특히 화물연대의 투쟁을 보면서 충분히 단결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활동으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듯함.

2003년 11월 17일 9명이 모여 마침내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갖고, 11월 26일 서울 노동지방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 노동조합의 성격

1) 조합간부: 위원장, 부위원장, 회감, 사무국장 등 최소의 임원외 5명의 조합원이 있다.

2) 조합형태: 산별노동조합(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산별노조 형태)

3) 주요활동:

- 사이트상에서 조직 활동을 하며, 회비의무도 인터넷 결제 방식을 할 예정임. 주요의결방식도 일인 일투표를 하기위해 PKI인증 도입을 준비중임

- 목표는 정조합원 1,000명이며, 목표가 달성되면 조합간부나 규약, 조직형태를 의견수렴하여 재정립한다고 함.

3. 전망

1)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제출 서류에 흠이 없는 한 현재의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가 기존 ‘오프라인 노조’에 익숙하기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는 월요일(2월 1일경) 설립 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체들이 노동조합 경험이 없기에 서류상 미비점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 등으로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임금 노동자(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분명한 가도 관건이다. 소위 프로 그래머들은 종종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부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2) 발전 전망은?

현재 회비 3,000원을 내는 준조합원은 약 9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8월에 개설한 IT산업노동조합연맹(<http://it.nodong.net/>)에 등록한 회원수는 11월 28일 현재 1,115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면 조합원 수는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민주노총에 가입 신청을 하였는데,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민주노총에서조차 온라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기에 오프라인 활동을 주력한 후 신청을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주요간부들의 노동조합 의식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회원수 364명이 참가하여 59%가 민주노총 가입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사이트)운영 방식은 가급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적 지향과 토대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IT산업의 문제점, 해결 방향, 노동조합의 과제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지 않으며 대중적 결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섭력인데, 교섭상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자칫 노동조합보다는 정보교류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바뀔 수도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직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합법화와 대중적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무선사업체 노동조합들의 연대체인 IT노협이 연맹이나 산별 노조로 발전하려고 할 때, IT노협이 이 조직과 적극 결합하고, 이 조직은 IT산업의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을 조직하는 부분활동을 한다면 명실공히 IT산업의 전체 노동자들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화

방

